

美에 이 말, 中에 저 말 들통난 '사드 재앙'

태평로



안용현
논설위원

4월 민주당이 감사원장 탄핵 소추안을 강행 처리하면 문재인 정부의 주요 비리 의혹들에 대한 감사는 차질을 빚는다. 사드 배치 고의 지연 의혹, 북한 GP(감시 초소) 철수 부실 검증 의혹, 부동산·소득·고용 통계 조작 의혹이 대표적이다. 사드와 통계 조작 의혹의 범죄 혐의는 검찰에 수사 의뢰됐지만, 감사 결과는 의결 기구인 감사위원회 의결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국민에게 감사 결과를 알릴 수 없다. 북한 GP의 흑 감사는 이제 시작이다. 현 감사원장 직무가 중지되면 문 정부가 임명한 감사위원이 이를 대행한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

사드 의혹은 드러난 것만 해도 기가 막힌다. 감사원의 수사 의뢰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가 사드 관련 한미의 군사 작전 내용을 중국과 사드 반대 시민 단체에 유출한 정황이 드러났다. 문 정부는 '사드 3불(不)'이 우리의 입장 표명인 건 국가 간 합의나 약속은 아니라고 했지만, 당시 국방부 문건에는 '한중 간 약속'이라고 적혀있다. 사드 추가 배치 등을 안 한다는 3불 외에 기존 사드 운용에 제한을 둔다는 '1한(限)

에 대해서도 문 정부는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국방부 문건에는 "양국(한중)이 합의한 '3불1한'은 유지돼야 한다"는 표현이 나온다. 국민을 속인 것이다.

더한 문제가 있다. '사드 기만'을 잘 아는 인사는 "미국에 이 말, 중국에 저 말 했다가 들통난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7월 미국에서 의회 지도자들에게 "혹시라도 저나 새 정부가 사드를 반복할 의사를 가지고 그런(환영영향평가) 절차를 하는

미국엔 "사드 의구심 버려도 좋다" 중국엔 "사드 운용 제한" 약속 신뢰 다 잃었는데 '기밀' 뒤편 '매국적 외교' 국민만 몰라서야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은 버려도 좋다"고 했다. 그해 김정은이 핵·ICBM 폭주를 하자 문 정부는 미국 측에 사드를 정식 배치하고 기지 운영도 정상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미국은 동맹의 말을 신뢰했을 것이다.

그런데 2017년 12월 문 전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정부 말이 달라졌다. 난데없는 '사드 3불'로 군사 주권을 내줬다. 중국 외교부는 3불은 물론 1한까지 약속 사안이라고 공개 주장했다. 3불은 미래에 추가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이지만, 1한은 이미 배치한 사드의 운용까지 중국 눈치를 보겠다는

뜻이어서 더 심각한 안보 주권 포기다. 문 정부는 '3불'은 약속이 아니고 '1한'은 없는 일이라고 했으나 미국도, 중국도 바보가 아니다.

트럼프 국방 장관이던 마크 에스퍼는 회고록에서 "2020년 한국 측에 '사드 철수를 고려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사드 정상화 약속을 계속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이 미국에 한 약속과 중국에 한 약속이 서로 상반된다는 사실을 알아챘을 것이다. 중국도 문 정부의 '한 입 두 말'을 모를 리 없다. 마·중 모두 '한국은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라고 여겼을 것이다. 외교 재앙이다. 그런데도 문 정부는 "균형 외교, 실용 외교"라고 자화자찬했다.

국민이 알아야 할 사드 진실은 산더미 같지만 관련 내용 대부분은 문 정부가 대통령 기록물이나 외교·국방 기밀로 묶여놔 공개가 불가능하다. 공개를 검토하면 야당 측은 '외교 협상 과정이 드러나면 국익을 해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 외교 내용을 몰라야 할 미국과 중국은 이미 다 알고 있다. 우리 국민만 군사 장비 운용에 외국의 간섭을 허용한 매국적 교섭 경위와 이런 계약 의혹 등을 몰라야 한다. 그래서 재발을 막을 수 없었다.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지금이라도 외교부나 국방부가 가치가 떨어진 기밀 일부만 풀어 국민은 진실을 알 수 있다.

김준의 맛과섬 [118]

진도 해삼 내장 비빔밥

연간 세계 해삼 생산량 20여 만톤 중 90%가 중국에서 소비된다. 중국은 소비량의 70%를 자국에서 채취하고 나머지 30%는 수입한다. 우리나라와 일본을 비롯한 해삼 생산국이 중국 해삼 시장을 주목하는 이유다. 전라남도도 2010년대 초반부터 진도 조도 해역에 해삼 양식 섬을 만드는 일을 해 왔다. 진도에 들렀다가 해삼 내장 비빔밥을 보고 그때 생각이 떠올랐다.

해삼은 오이처럼 몸이 길쭉하고 표면에 울퉁불퉁한 돌기가 많다. 그래서 영어로 '바다오이(Sea cucumber)'라고 한다. 중국 '본초도경'에 '육지의 인삼처럼 자양과 보혈 효과가 있어 바다의 인삼'이라는 뜻으로 해삼이라 불렀다'고 한다. 우리 "자산어보"에 해삼 효능이 인삼에 견줄 만하다고 기

록했다. 우리말로로는 '뽕' 또는 '도육'이라 했다.

도육이라는 이름이 말해주듯 해삼은 갯벌에 있는 유기물을 먹고 깨끗한 흙만 빨아낸다. 바지락이 수질 정화를 한다면 해삼은 갯벌이나 바다 밑을 청소한다. 해삼이 모든 해역에서 식하지만, 서해가 양식하기 좋은 이유다. 해삼 소비량은 늘고 있지만, 기후 위기 등으로 자연산 해삼 생산량은 감소하고 있어 어민이나 관련 기관에서 해삼 양식에 관심이 많다. 하지만 생육 기간이 길고, 채취할 때 해어나 잡수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해삼은 회, 물회, 데침, 장조림 등 다양하게 조리해 먹는다. 하지만 해삼에서 내장이 차지하는 양이 적고 유통도



쉽지 않다. 그래서 양질의 해삼 내장을 만나기 어렵다. 해삼 내장은 난소와 대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가늘고 긴 대장을 얹고 감지로 잡고 훑어 내리면 안에 든 흙이 깨끗하게 제거된다. 그리고 난소와 함께 가볍게 씻어 물기를 빼낸다. 여기에 김과 참기름만 더 하면 된다. 진도에서 맛본 해삼 내장은 냉동이 아니었다. 마치 막 해삼을 손질하고 꺼내 온 것 같았다. 따뜻한 밥에 노란 해삼 내장을 올리자 강한 명계 향이 올라왔다. 마른침이 넘어간다. 먹을 준비가 끝났다는 신호다.

전남대 학술연구교수

社 說

국민 당혹시킨 계엄 선포, 윤 대통령은 어떻게 책임질 건가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긴급 담화를 내고 "중복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회로 의원들을 긴급 소집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여야는 물론 국민이 모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헌법은 전이나 사변 같은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군 병력으로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거의 아무도 없을 것이다.

국회는 4일 새벽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고, 대통령은 이를 수용해야 한다. 민주당과 야권이 192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곧바로 해제될 게 뻔한 계엄령을 대통령이 선포한 것이다. 게다가 여당인 국민의힘 대표까지 계엄을 국민과 막겠다고 했다. 어이없는 사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를 통해야 하는데 이날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았을 가능성도 높다. 계엄 선포의 법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밝힌 자유 헌정 질서 수호는 최근 민주당의 입법 권력을 통한 행정 권력 무력화를 염두에 둔 것 같다. 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간부 3명에 대한 탄핵에 들어갔다. 대통령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은 채 윤석열 정부를 무력화하고 사실상 '민주당 정부'로 뒤집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감사원장을 탄핵하면 수개월 걸리는 현재의 결정 전까지 감사원장의 직무는 멈춘다. 이 경우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감사위원들이 감사원장 권한을 대행하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감사 및 수사 의뢰는 중단된다. 감사원 3급 이하에 대한 물갈이 인사까지 가능하다.

윤 대통령이 이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질 수는 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합당한 선이 있다. 민주당이 폭주한다고 해서 윤 대통령이 심야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도를 심각하게 넘은 조치다. 어떻게 지금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상황인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상황도 아니고, 그럴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 것도 아니다. 세계 10위권 민주국가로 국가 망신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국민에게 답해야 한다.

간첩법 개정 찬성하다 미적대는 진의가 뭐가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형법 98조)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민주당 내부에서 "법을 악용할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지난달 13일 국회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을 법사위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개정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면 언제 개정안을 처리할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지금 세계는 치열한 스파이 전쟁 중이다. 사실 안 그런 때가 없었다. 영국 정보국장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돕는 서방국들을 향해 "놀랄 만큼 무모한" 공작을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미 FBI는 10~12시간에 1건씩 새로운 중국 관련 간첩 사건 조사를 시작한다고 한다. 이런 세계에서 북한과 손잡은 러시아, 중국에 둘러싸인 한국에 외국 간첩을 처벌할 범조차 없으니 벌거벗고 전장에 서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여야가 간첩법 개정에 합의한 것도 중국인에게 포섭된 국군 정보사 근무원의 기밀 유출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이 공

개된 8월 초만 해도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간첩법 개정에 협조하라"고 했다. 그런데 4개월 만에 태도가 달라진 것이다. 법 개정 내용도 간단하다. '적국을 위하여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 또는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로 돼 있는 것에서 '적국'을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로 바꾸는 것이다. 법을 지키며 평범하게 살아가는 일반 국민과는 아무 상관도 없으며 그 '악용'을 우려할 이유도 없다.

과거 간첩 누명을 쓴 피해자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는 민주당 스스로도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의 '우려'는 주로 중국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이나 그 주변 인사들이 중국 공산당과 교류가 많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그 교류 자체를 무마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정상적 교류는 권장할 일이다. 다만 중국 또는 다른 제3국에 우리 국가나 산업 기밀을 넘기지 말라는 것이다. 기밀을 넘기면 간첩이다. 자기들의 행동이 개정된 간첩법에 걸릴까 두려워 민주당이 주변 단체 인사들이 개정을 무산시키려는 것이 아닐까 바란다.

병사 월급 올리고 부서관 수당 인상 막은 국방 포퓰리즘

민주당이 '감액 예산안'을 밀어붙이면서 초급 장교와 부서관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증액 계획이 전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국방부는 초급 간부 당직비 인상, 부서관 단기 복무 수당 인상, 학군 후보생(ROTC) 생활 지원금 인상, 초급 간부 이사비 현실화, 군 관사 임주 청소비, 주임원사 활동비 인상 등을 추진했다. 총액은 3000억원 정도인데 무기 관련 예산을 조금 줄이더라도 확보하려 했다. 그런데 민주당이 감액해 불가능해졌다.

군의 실질적 기동은 병사가 아니라 부서관들이다. 핵심 무기 운용도 이들이 한다. 그런데 이 초급 간부들이 대거 군을 떠나고 있다. 열악한 처우가 큰 원인이다. 최전방 수색 대대 간부들은 컨테이너 가건물에 거주한다. 당직 근무비는 경찰·소방관의 5분의 1이다. 낮은 군 관사를 보고 눈물짓는 초급 간부 아내들이 적지 않다. 월 10만원도 안 되는 주택 수당은 20년 넘게 그대로다. 이러니 지난해 군을 떠난 경력 5년 이상 장교·부서관이 9481명으로 역대 최다이다. 전년보다 24% 늘었다.

초급 장교의 70%를 담당하는 ROTC 지원율도 해마다 급감해 정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대학이 속출하고 있다. 군의 허리가 꺾일 위기다.

민주당은 초급 간부 처우 개선 예산은 안 주면서 내년 병장 월급을 200만원으로 올리는 예산 5000억원에는 손대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데도 그냥 됐다. 병사 숫자가 부서관보다 훨씬 많기 때문이다. 병사 표를 잃는 것은 걱정이 되고, 국방이 흔들리는 것은 걱정하지 않는다. 부서관 수당 등이 이번에도 동결되면 내년도 병장 월급과 하사 월급은 사실상 역전될 수도 있다. 부서관 제도 존립 자체가 위협해진다.

애초에 '병사 월급 200만원' 자체가 무리한 포퓰리즘이었다. 그런데도 표를 얻기 위해 지르기로 공약을 했다. 여기서 심각한 문제들이 파생하자 땀질식으로 부서관, 초급 장교 처우 개선을 하려 했다. 하지만 이번엔 민주당이 가로막는다. 늘 안보 위협에 시달리는 나라의 정치인들이 하는 일이 이렇다.

〈괴물〉 국회의 〈국가 무력화〉 행태

대한민국 국회, 미쳤다... 《22대 국회+이재명》 탄핵하자

뉴데일리
newdaily.co.kr

﴿덧여놓고 탄핵 질》+﴿직무 정지-국정 마비》 기도
﴿체제 전복》 하겠다는 것
자유인들 《저항》만이 해법

이재명 재판은 《중대 범죄 혐의》가 있어, 적법 절차에 따라 기소-재판-판결한 것뿐이다. 저들은 이 당연한 국가기능을 통해 뒤엎으려 한다. 《국가 무력화》다. 왜, 무력했나?

※ 그렇다고 《국민의힘 분열 = 친윤-친한 반반(半-半) 책 임》이란 양비론엔 동의할 수 없다. 《친윤》의 문제도 있기가 할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악(惡)》이 있다. 좌익의 체제전복 기도가 그것이다. 《친한》은 이 《거역(巨惡)》엔 맞서 지 않고, 《윤석열 제거》에만 올인했다. 이걸 아니다.

6개월 내 승부? 그럼 우린 3개월 내 끝내자!

때는 너무 늦었다. 《한동훈 국민의힘》은 자유 진영의 통합된 신뢰를 잃었다. 자유 진영은 이제 어찌할 것인가?



◀ 《치베스의 베네수엘라》처럼 《이재명의 대한민국》을 꿈꾸는 이재명. 폭주 야당의 국가 기능 무력화 시도가 밀도 끝도 없이 자행되고 있다. © 뉴데일리

국회? 없다

대한민국에 국회는 없다. 《괴물》이다. 《괴물》이야말로 탄핵해야 한다. 쫓아내야 한다. 《괴물》은 미쳤다. 《괴물》은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했다. 검사들을 줄줄이 탄핵한다. 감사원장을 탄핵한다. 국방부 장관도 탄핵한다. 이어서 또 누구, 누구, 누구들!

한동훈의 잘못된 노선

① ※ 대통령의 권력 기반이 너무 없다. 여당 내부에도 없다.
※ 여론 지지가 낮다. 여론 《조사》인가 《조작》인가?
※ 비(非) 좌파 언론들이 《그나마 우파》 정부에 적대적이다.
※ 사법부에도 《운동권》이 침식해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구체적이고 중대한 잘못이 있다면 또 모른다. 《영부인 논란》? 그게 ★ 타지마할 ★ 사위 특채 ★ 관봉권 ★ 딸에게 거액 송금 의혹보다 더 심한가?

국민의힘이 그렇듯 경중(輕重)을 가리지 못하는 사이, 이재명의 《방탄용 국가기능 죽이기》가 117년 만의 폭설처럼 덮쳤다. 《한동훈의 내부 총질》이 그걸 고무했다. 뭘, 《김건희 특검》 고려하겠나? 그는 주적(主敵)부터 쳐부수고 그 공(功)으로 당내 입지를 강화했어야 했다. 그게 순리다.

※ 자유 국민은 국민의 힘을 넘어서는 전투적이고 폭넓은 《자유 진영 공동투쟁 네트워크》를 엮자!
※ 이 역망으로 《22대 국회+이재명》을 탄핵하자!
※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상 대통령 권한》을 최대한 행사하라!

가자, 자유인들, 자유 레지스탕스(저항) 투쟁으로! 저들은 악을 쓴다. 《6개월 안에 승부 내겠다》. 자유인들도 외치자. 《3개월 안에 승부 내겠다》.

세상에 이런 행태가 어디 있나? 탄핵은 잘못된 게 있어야 하는 거다. 장관들은 아무런 잘못한 게 없다. 그런데도 저들은 《덧여놓고 탄핵 질》이다. 《직무 정지-국정 마비》를 노린 것이다.

② 대중이 모든 불명불만 탓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씌운다. 문제인 좌파 정권은 잘했나? 《악한 대통령》을 흔들어 싸면서, 그가 무엇인데 다 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투다. 이게 말 되나?

③ 국민의힘이 《뭐가 더 중한지》를 도무지 모른다. 당장 코앞의 재앙은 좌익 쿠데타다. 1mm만 더 밀려도 ★ 친(親)윤 ★ 친(親)한이 한 구멍이에 묻힌다. 국민의힘만 이걸 모른



◀ 뭘 《김건희 특검》? 그럼 《김정숙+문대혜 특검》은? 《김해경 특검》도? © 뉴데일리 뉴시스

이류 근일 뉴데일리 논설위원 / 전 조선일보 주필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칼럼으로 2024년 12월 11일 게재 되었습니다.